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9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9월 14일 ~ 2013년 9월 27일

주요 키워드

- 1. 복지부, 위험분담제·사전 약가인하제 등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16일 신약 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에 대한 '사전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되는 등 약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 2. 로봇수술 급여화 논의** : 정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언급한 의료기관의 로봇수술 보험급여화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안정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암 질환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3. 진영 복지부 장관 사표 제출**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7개월만인 27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반려했다. 진영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 4. 의사 8천명 행정처분 논란 속 의산정협의체 무기한 지연** :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8000명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의·산·정 협의체' 회의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협의체는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5. 기타** :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전면 무료화, 복지부 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에 행정처분 예고, 건보공단 2013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간호인력 개편안 국회토론회 개최, 한-사우디 보건부 장관 의료 IT 시행협약 체결 등 합의의사록 서명,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명 25일 명단 공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7.4%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진흥원 글로벌 보험사 시그나와 업무협약, 강북삼성병원, '스마트 문진' 저작권 등록

1. 보건의료정책

○ 의사 8천명 행정처분 논란 속 의산정협의체 무기한 지연 (9. 14)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8000명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의·산·정 협의체' 회의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한 뒤 9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확실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의산정 협의체 3차 회의는 지난 7월 30일 개최된 바 있다. 일정이 연기되자 일각에선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추이를 살피기 위해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 수수자는 8000여명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8000명은 전체

개원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 논란은 적발된 수가 많다는 데도 있지만, 의협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자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쌍벌제 이전 이후와 무관하게 복지부가 300만원 이하 수수 혐의자에 대해서까지 처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감사원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도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협은 투쟁준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어린이 정기에방접종 전면 무료 (9. 15)

박근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정기에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현재 1회 접종시마다 5000원씩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전면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 약 600만명이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B형간염·수두·일본뇌염 등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11가지 백신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정기에방접종 횟수는 총 26회(콤보백신 이용 시 22회)로, 1회 접종 비용을 평균 2만2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57만원이 소요된다. 현재는 57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13만원(5000원*26회)을 내야하는데, 내년부터는 13만원의 본인부담금도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복지부-외교부, 보건의료 세일즈 외교 협력 강화 (9. 16)

한국의 선진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홍보 등 보건의료 분야 세일즈 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16일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복지부-외교부 간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건의료 분야 세일즈 외교 강화를 통한 창조 경제 실현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의 주요 내용은 ▲재외공관 망 활용 ▲현지 보건의료 제도·시장 동향 파악 ▲공공병원 신축·운영, 보건상품 정부 조달 등 현지 발주 정보 모니터링 ▲진출국 내 의료기관 설립, 의료인 면허 등 관련 규제 완화 협의 ▲국내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 위한 보건의료 정책 협의회 창설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원만한 추진 등이다.

○ 복지부, 위험분담제·사전 약가인하제 등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9. 16)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에 대한 '사전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되는 등 약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신약 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가인하 조치로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고, 신약 가격 결정방식 등을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평원 경제성평가 값(ICER) 수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약 보험등재 기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정 여부 평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하며,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한다.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해 협상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전년 대비 60% 이상 청구액 증가이던 협상대상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절대금액 50억원 이상 증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협상 제외 기준을 3억 미만에서 15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청구액이 작은 소형품목들은 원천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 복지부, 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에 행정처분 예고 (9. 17)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장세척 의약품 처방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의료인

들에게 배포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신장 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용'이 삭제된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에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약처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되던 1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총 4차에 걸쳐 실시했고, 이에 요양기관(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하는 건수는 2009년 27만여건에서 2013년 상반기 3000여건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11개 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투약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해석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오는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이후 적발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9. 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규격품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한시적 기한 연장을 통해 홍삼 및 백삼을 의약품으로 사용시 규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약재로 사용하는 홍삼 및 백삼을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2013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9.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4조7687억원으로 지난해 23조9349억보다 8338억원(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09년)11.9%→('11년)4.9%→('13년)3.5%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8조9255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36.0%를 차지했다.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급여비는 19조3233억원으로 지난해 18조5958억보다 7,276억원(3.9%) 늘어났다.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8조5289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9%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20조19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직역별로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6조 480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0% 증가한 반면, 지역 부과금액은 3조7138억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대(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99원이며, 직장가입자는 9만693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1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올 상반기 요양기관 중 치과병원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치과에서 보험급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치과병원 1기관당 급여비는 평균 1억5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치과의원 7.9%(3600만원), 요양병원 7.9%(9억6300만원) 순이었다. 치과병원은 지난해 상반기 201기관에서 올해 207기관, 치과의원은 지난해 1만5277기관에서 6월 현재 1만5614기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간호인력 개편안 국회토론회 개최 (9.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과 남윤인순 의원실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토론회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을 둘러싼 문제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직종간 이해대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병원자본의 간호직 고용조건 변화를 통한 이해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와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 한-사우디 보건부 장관, 의료 IT 시행협약 체결 등 합의의사록 서명 (9. 23)

보건복지부는 22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국 측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보건부 간에 보건의료 3개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보건부는 지난 4월 사우디 보건부 장관 방한 시 보건의료 6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한 이후, 5개월간의 상호 실무협상을 거쳐 우선 ▲의료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의료 정보기술 ▲의료기관간 Twinning Project 등 3개 분야의 세부적 범위와 방법을 정해 시행하기로 확정된 것이다. 시행협약안에는 ▲사우디의 모든 보건소 및 1개 권역 내 있는 공공병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한국 측이 전담 ▲HIE(진료정보 교류), Blood Bank(혈액관리시스템), Telemedicine(원격 진료), POC(현장진료) 등 국가 단위 보건의료 정보화 프로젝트 우선 참여 ▲합작법인 사우디 내에 설립·운영 ▲협약 기간은 5년 + 5년(갱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국 보건부는 사우디 의사가 한국에서 유료 연수를 받는 시행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10년간 사우디 의사 1인당 1개월 기준 3000 US달러를 지불받고 펠로우쉽 과정과 단기 연수과정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협약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또한 양국 보건부는 향후 사우디 내 한국 의료홍보회 및 연수설명회를 공동개최해 연 평균 100명의 사우디 의사가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밖에 삼성서울병원과 킹파드왕립병원(KFMC)가 뇌 조직은행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사우디 의료기관 간 쌍둥이 프로젝트(Twinning Project)의 첫 번째 결과물도 나왔다. 한편, 협상이 진행 중인 나머지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의료 R&D ▲Visiting Physician Program 및 전문가 상호방문 ▲병원 설계 및 건립 등이다.

○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명 25일 명단 공개 (9. 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 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 로봇수술 급여화 논의 (9. 25)

정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언급한 의료기관의 로봇수술 보험급여화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안정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암 질환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로봇수술 전문가들은 24일 '제2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암 보장성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로봇수술의 급여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로봇수술 급여화 방안에 불씨를 던진 복지부는 아직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관계자는 24일 "1차적인 검토를 거쳐 로봇수술을 선별급여 예시로 제시했으나, 적용 수거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별급여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나, 로봇수술을 선별급여에 포함시킬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선별급여 항목은 '급여평가위원회(가칭)'가 설치되는 12월 이후부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쟁점이 될 만한 항목에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한 후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별급여 예시 항목에 로봇수술을 포함시킨 바 있다.

○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처리 기준 개정 (9. 25)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

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자로 행정예 고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2조는 1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 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복지부 내년 예산 46조3500억원 확정 (9. 26)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46조3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41조643억원) 대비 12.9% 증가한 금액이 다. 복지부는 26일 '2014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357조7000억원)대비 13% 수준이며, 복지 분야 전체 지출 금액(105조9000억 원)의 43.8%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올해 대비 예산이 14.2%(3.6조원 ↑), 기금이 10.7%(1.7조원 ↑)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가 각각 올해 대비 15.1%(4.9 조원 ↑), 4.1%(0.3조원 ↑) 늘어났다.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산업 육성 부문에서 대폭 늘어났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 지원에 각각 109억원((‘13)515→(‘14)624억원), 12억원 ((‘13)40→(‘14)52억원)이 증가했다. 보건의료 육성 부문은 ▲연구중심병원 육성(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36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150 억원),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100억원) 등의 신규 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

○ 진영 복지부 장관 사표 제출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 사표 반려 (9. 27)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7개월만인 27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반려했다. 진영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총리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사표를 받을 수 없어 반려한다”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사표를 즉각 반려함에 따라 진 장관의 사퇴 여부는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일본, 무료난자 제공 10명째 (9. 17)

난자가 없는 여자에게 제3자의 난자 제공을 중개하는 일본 최초의 민간단체인 '난자제공 등록 지원단 체(OD-NET)'는 무료로 난자를 제공받는 7명을 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 단체는 지난 5월에 3명을 선 정한 바 있으며 이로써 총 10명이 되었다. 이번에 제공받는 여성은 제공자와 환자를 연결하는 '매칭위원 회'에서 지난 7월 30일 결정했다. 여성 7명은 동 단체와 제휴하는 불임치료시설에서 이미 상담을 받았으 며, 빠르면 6개월 후에 채란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자매나 지인으로 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법인에 의한 제3자 난자 알선은 올초부터 실시됐다. 난자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가 15세가 된 시점에서 희망할 경우, 주소나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아이에게 제공되는 조건 등을 수락해야 한다. 현재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한 난자를 제 공하는 기증자는 20명이며 난자를 제공받기 원하는 여성은 45명에 이른다.

○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7.4% ... OECD 평균보다 낮아 (9. 17)

'OECD Health Data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용 중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2011년 기준 GDP 대비 7.4%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9.3%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1.3%p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OECD 평균(0.7%p)보다는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17.7%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은 55.3%를 차지했으며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평균 지출(72.2%)보다 낮았다. OECD 회원국의 국민

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85.6%), 덴마크(85.3%), 노르웨이(84.9%)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에서의 지출은 35.2%로, OECD 평균(19.6%)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을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US달러 PPP(구매력평가환율)로 보면 2198달러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국민의료비(3322달러)에 비해 1124달러 낮았다. 이는 지난 2006년 1479달러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8508달러), 노르웨이(5669달러), 스위스(5643달러)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소모품 지출은 20.2%를 차지해 OECD 회원국의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16.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진흥원, 글로벌 보험사 시그나와 업무협약 (9. 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3일 글로벌 보험기업 시그나 코퍼레이션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시그나 가입자들의 한국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진흥원과 시그나와의 협약체결은 한국 주요병원에서 시그나 보험가입회사 직원들이 한국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진흥원은 더 많은 글로벌 보험회사들과의 업무협력 확대를 통해 해외환자 50만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초석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강북삼성병원, '스마트 문진' 저작권 등록 (9. 23)

10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친 강북삼성병원의 '스마트 문진'이 9월 초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강북삼성병원 종합건강진센터는 종이로 작성하던 문진표를 온라인 상으로 대체한 '스마트 문진'을 업계 최초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했다. 스마트 문진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선 언제, 어디서나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고, 자동 저장 기능으로 작성 시간을 줄여준다. 또한 문진표의 분실 우려가 없고 건진 시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종이 문진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종이 절약으로 환경까지 보호하는 건강 문진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3. 제약업계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약가개편안, 받아들일 수 없다” (9. 16)

복지부는 16일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과 ▲위험분담제 도입 방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산정대상 약제의 업무처리 절차 변경안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KRPIA는 “업계가 복지부와 함께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은 업계의 주요제품의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유망 신약의 경우 등재 후 5년 이내에 20~30% 정도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등재 후 약가 인하조정기전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된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를 위한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신약가격결정 방안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KRPIA는 “지난해 일괄약가 인하를 하면서 복지부가 신약가치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후 1년 만이다”며, “업계가 기다린 시간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 더욱이 위험분담과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전 개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시된 신약가치 반영은 제약업계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제약협회,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무료 실시 (9. 17)

한국제약협회가 국내 제약업계의 임상시험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임상시험 전문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은 9월 30일부터 'GCP 기본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임상시험 품질관리 교육', '임상시험 모니터링에 대한 실습교육', '임상시험 자료관리에 대한 교육' 등 모두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 일본 진출 다국적제약사 위조약 직접 단속 (9. 23)

일본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일본 내 위조약품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이자, 바이엘, 일본 일라이 릴리, 일본 신약 등 4개사는 이번달 들어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위조약 단속에 나섰다. 일본에서 위조 의약품의 직접 피해액은 분명치 않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39만 점 이상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 의약품인데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 약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포함돼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업들은 위조약을 적발하는 데 경찰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08년부터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 신약조합, R&D 기획 전문인력양성 심화과정 들입 (9. 25)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 25일 R&D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획전문인력 양성과정인 '제약산업 R&D 기획 전문인력양성 2단계 심화과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80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신약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7월 개최된 1단계 과정에서 R&D 전략수립과 전략실행에 요구되는 기술개발기획을 위한 역량함양에 주안을 두었다면 이번 2단계 심화과정에서는 전략과 기획을 통해 도출된 프로젝트의 시장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강화에 주안을 두고 있다.

○ 복지부,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기준 신설 (9. 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이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사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사는 59.5%의 합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의 합(합)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엄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환자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원가산정 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이 개선된다.

○ 제약협회, 임상개발연구회와 공동발전 MOU 체결 (9. 27)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임상개발연구회는 27일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교류,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정보교류 및 자문 협력,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 관련 공동 교육 및 심포지움 개최, 기타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 또 업무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무료로 실시키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기본교육, 임상시험 품질관리, 모니터링 실습 등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4. 의업단체 동향

○ 의협, 쌍벌제 개선 위한 서명운동 (9. 16)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중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을 위한 탄원운동에 들어갔다. 의협은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로비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노환규 의협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참여해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맞춰 시작된 서명운동은 식사를 하러 나가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의협은 이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회원 대상의 무기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아청법 개정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 ▲의약분업 반대 등 4가지로 진행됐다.

○ 의협, 고혈압 인센티브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 (9. 16)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2012년도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에 대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고혈압 진료의 적정성 평가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 4928곳에 총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혈압·당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모든 기관의 적정성평가 결과 '양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 의협 회장-16개 시도지사회장, 화해 모드 전환 (9. 17)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16개 시도지사회장들이 그간 회무 방식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흩어진 역량을 한데 모아 투쟁의 결집력을 집중키로 뜻을 모았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지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 임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의료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협 회무 운영을 위해 의협 집행부와 16개 시도사회와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대정부 투쟁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도지사회장과의 논의과정이나 상임이사회와의 의결 없이 회장이 단독으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 한의협, 러시아 방문해 환자유치 및 한의학 교류방안 협의 (9. 24)

대한한 의사협회 방문단이 한의약분야 해외환자유치와 한의학 교류 증진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방문 기간 중 러시아의 의료정책과 의료제도 및 법규와 의료인력 현황(자격기준, 업무범위 등),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 현황 및 의료보험제도, 한의사 진출 시 정부 업무협조 방안 등의 현안을 살펴봤다. 또 러시아 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해 학장 면담을 실시하고,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암침법 강의 및 침구실습 시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방문단은 러시아 의료사회보험공단 책임자와 러시아 국회 의료위원회 세르게이 V 칼라시니코프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사의 현지 진출 전망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한의약분야 의료관광객 송출 및 러시아 시장진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의협, 의사 1000여명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반대 서명 받아 중앙지법에 제출 (9. 24)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사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는 24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원 1186명의 서명이 담긴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 탄원서는 지난 16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서명운동과 더불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 치협 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9. 24)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4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 신설이 현재 연구소 내에 있는 연구기획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조직 통폐합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차기회의에서 결정기로 했다.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부서 신설 건을 의결했다. 또 연구부서를 총괄·감독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객원연구원 등의 임용 등이 포함된 안을 상정한 바 있다.

○ 의협, 의료 제도 개선 위해 미래전략위 구성 (9. 25)

대한의사협회는 기획정책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의협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기획정책위원회는 그동안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의협이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왔다. 또 기획정책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로 일차의료강화특위 및 사무장병원특위를 운영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일차의료활성화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감과 더불어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 역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협&병협, 투쟁위 및 특위 구성 (9. 26)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가 의료제도 개선과 리베이트 피해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의사협회의 경우, 가칭 '의사 인권회복 투쟁준비위원회'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 인권회복 투쟁위'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위'는 리베이트 개념의 확대해석·적용에 대한 대응과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다른 직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 8000명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부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대정부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윤수 회장 등 병원협회 임원진은 지난 24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만나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 8000명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런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명단과 금액까지 파악된 상태에서 행정처분 없이 넘어갈 경우, 특정 직역 감싸기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의료계 “아청법, 처벌 수위 지나치게 과도” (9. 26)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개최한 '아청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 각 직역 단체장들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법안 처벌의 수용도가 형평성 차원에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의료계 내 아청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각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5. 질병/기타

○ 미국, 슈퍼박테리아 감소 (9. 17)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치명적인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이 미국에서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질병예방통제센터(CDC) 연구진이 'JAMA 내과학'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2011년 총 감염자가 약 8만400명으로,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3만명 정도가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9개 주에서 취합한 자료와 다른 기타 자료를 합산해 나라 전체의 발생률을 추정했다. 병원에서 발병하는 침습성 MRSA 감염은 최대 54%로 감소했으며, 지역사회에서 가장 적게 떨어진 것도 5% 대에 이르렀다. 또 다른 유형인 헬스케어 관련 지역사회 총 감염은 46% 정도 떨어졌다. 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다.

○ 아데노바이러스 유행 ... 환절기 호흡기질환 주의 (9. 17)

질병관리본부는 아데노바이러스(ADV) 등 호흡기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데노바이러스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RS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호흡기바이러스로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지만, 5세 이하의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하기도 감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